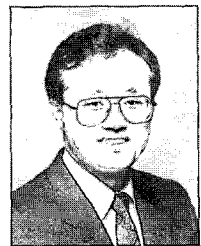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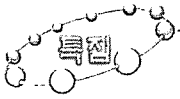
고등인력 양성사업 BK21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교육부는 21세기 지식기반 국가의 발전을 주도할 창의적이고 국제적인 고급 두뇌 인력 양성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난 1999년 6월 고등인력 양성사업(BK21)을 추진하였다. 고등인력 양성사업(BK21)의 구체적인 추진 방안으로는 세계적 수준의 대학원을 육성함으로써 대학원의 연구역량을 획기적으로 제고시키고, 이에 따른 연구결과의 산업화를 통하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이 사업의 추진 학문분야는 정보기술, 의생명, 농생명, 기계, 재료, 화공, 물리, 화학, 생물 분야로 국가경쟁력에 직결되며 국제적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9개 분야로 한정하였다. 또한 신청 요건을 두어 신청 분야당 일정한 수의 교수가 확보된 교육기관에 한하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함으로써 집중지원의 제도를 마련하였다.

뿐만 아니라 교육부는 이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을 대학원 중심으로 전환 시키기 위하여 사업 참여 신청과 함께 대학 정원의 감소, 대학원 전담교수 임용제, 연봉제 등과 같은 제도 개혁을 사업 참여의 일환으로 사업단의 목표 및 추진방법에 포함시키도록 하였으며, 참여 연구단 연구원들의 연구결과를 국제적 학술지에 발표토록 하고, 사업단은 국제적 대학원 육성을 위하여 대학원 강좌에 외국어로 강의하는 강좌를 설



선우명호
한양대학교 교수



강하도록 하였다. 이 밖의 보다 자세한 이 사업의 취지 및 추진배경, 목적, 사업 신청자격, 사업 추진계획, 사업단 구성원칙 등은 BK21사업 설명회 책자를 참고할 수 있다[1].

그렇다면 지금까지 간략히 설명한 바와 같이 세계적 수준의 대학원 육성과 더불어 국가 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정부에서 추진하는 고등인력양성사업(두뇌한국21)으로 과연 한국이 7년 후 두뇌강국이 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왜 대부분의 이공계 교수들이 이 사업에 대하여 비판적인가. 물론 교수 개개인이 속해 있는 학교, 지역, 전공에 따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국가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우리나라 대학 교육이 보다 빠르게 변해야 한다는 데 이의를 제기하는 교수는 많지 않다. 문제는 이 사업의 추진 방법에 많은 교수들이 동의하지 않는 것이다. 2000년 국무총리 산하 정책평가위원회는 교육부가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고등인력 양성사업(BK21)이 국민의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6대 실패사업의 하나로 지목된 것만 보아도 이 사업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출발하였음을 알 수 있다. 교육부 주장대로 이번 사업이 국가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이공분야 지원 사업이 주된 사업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이공계 교수로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 사업을 바람직하게 추진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고등인력 양성사업(BK21)의 문제점은

첫째로 사업 기획단계에서의 취지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취지가 전혀 다르다는 데에 있다. 지지하는 바와 같이 최초 이 사업이 기획될 때는

서울대학교를 학부 중심에서 대학원 중심 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출발하였다. 이를 위하여 학부 정원을 70% 이상 줄여야 한다는 교육부의 초기 사업 방침에 해당 대학(서울대) 교수들의 반발이 거세어지자 이 사업이 갑자기 고등인력양성사업(BK21)이라는 사업으로 변형되었으며, 사업이 본래의 취지와 관계없이 확대 재편되면서 사업의 취지나 목적이 변질된 것이 가장 큰 문제의 하나이다.

둘째로 이 사업이 충분한 사전 준비 작업 없이 추진되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많은 교수들로부터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 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우리나라 대학 및 대학원 교육이 보다 빠르게 변해야 한다는 데 많은 교수들이 동의한다. 이 사업의 결정이 장기적인 국가 기술 경쟁력 강화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충분한 사전 준비와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였다. 하지만 이 사업은 지나치게 서둘러져 졸속행정이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중국의 경우 21세기를 대비하여 100개의 대학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211工程사업을 시작하였다. 이 사업의 목표는 우리의 BK21사업과 비슷한 반면에 추진방법에서는 많은 차이점을 발견하게 된다. 이 211工程사업은 1985년에 입안하여, 1988년에 지원 신청을 받았으며, 사업계획서에 대한 심사는 1992년부터 96년에 걸쳐 철저하게 진행되었다. 그리고 심사결과에 따라 1996년 61개의 대학을 선정 지원하고 있으며, 나머지 지원 대상학교를 2001년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 이러한 사실은 이 사업이 얼마나 많은 준비와 철저한 평가에 의하여 진행되고 있는가를 잘 설명해 주

고 있다.

이에 반하여 우리의 경우는 교육부가 고등인력양성사업 공고를 1999년 6월 4일에 하고, 접수 마감을 7월 20일로 못박음으로써 방대한 7년 대計 사업계획서를 한달여 만에 만들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참여를 원하는 많은 학교들이 충분히 준비할 수 없었음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뿐만 아니라 7년 간 총 1조 4천억원을 지원받게 될 대학 선정에 관한 심사기간으로 1개월이라는 시간은 철저한 심사를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이런 식의 사업추진에서 참여대학의 철저한 준비와 평가위원의 신중한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믿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대다수의 교수, 학교, 학생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한 결과를 낳게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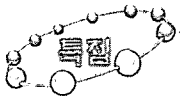
셋째로 이번 사업에 참여조건으로 전공학과별 참여교수의 숫자를 자격조건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한 예로 정보통신분야의 경우 참여대학의 이 분야 교수 수가 50명 이상이 되는 학교에 한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함으로써 아무리 훌륭한 교수라도 소속 기관이 이 숫자 제한 자격을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한 번 참여하지 못할 경우 이 사업이 수행되는 7년 동안은 참여가 거의 불가능함으로써 훌륭한 기술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이공분야 경우 90년 이후 교육부와 대학교육평가협의회에서 실시하는 학과별 평가에 맞추어 많은 훌륭한 교수들이 초빙됨에 따라 지역에 관계없이 교수들의 연구 능력은 거의 평준화된 상태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교수가 참여

할 수 없는 이 사업이 진행되는 7년 동안은 극소수의 참여 대학 교수를 제외하곤 대다수의 교수들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연구력을 대부분 잃게 될 것임으로 국가 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한 BK21사업 목적에 상반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업의 주관기관인 교육부 주장대로 이 사업이 소수의 학교에 한하여 우수한 학생들에게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함이라면 전국에서 경쟁력을 갖춘 훌륭한 교수인력을 선발하여 참여대학으로 공정하게 재편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을까? 아니면 교수들이 자유롭게 직장을 바꿀 수 있는 유연한 시장환경 구축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로 이 사업으로 학문의 근친교배가 만연될 우려가 있다. 교육부는 이 사업이 진행될 경우 거둘 수 있는 기대효과로 연간 2000여 명의 양질의 두뇌인력 양성을 꼽고 있다. 더불어 학문의 근친교배 배제를 목적으로 참여 대학의 동일 대학 출신 대학원 입학율 50%까지 제한하였다. 하지만 분야별로 2 내지 3개 학교에 참여를 국한함으로써 학문의 근친교배가 장려되는 것은 아닌지. 실제로 이 사업이 추진되면서 연간 2000여 명의 박사급 연구 인력이 소수 참여 대학으로부터 학문의 근친교배에 의하여 배출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과학 기술 분야의 발전 속도를 감안할 때 7년 동안 기술 인력 양성을 특정 일부 대학에 제한하게 될 이 사업으로 우리의 기술경쟁력이 빠르게 변하고 점점 다양하게 세분화되는 지식 기반 국제 기술 경쟁사회에 적응하고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믿는 교육인이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다섯째로 이 사업으로 인하여 많은 고급 기술 인력이 산업체로부터 교육기관으로 이동하고 있다. 국가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산업체는 많은 양질의 기술인력 확보가 필수적이다. 이 사업 추진 전에 우리나라 전체 공학계열 박사급 기술 인력의 70%가 교육기관에 종사하고 있던 실정에서 이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산업체의 고급 기술 인력이 참여 대학의 BK연구교수로 역이동하고 있는 뜻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산업체 기술인력의 교육기관 집중화로 국가 기술 경쟁력 제고라는 이 사업의 큰 명제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여섯째로 7년간 투입되는 사업비의 대부분이 인건비라는 것이다. 이번 사업비의 대부분은 석·박사과정 학생들의 인건비다. 따라서 사업이 종료되는 7년 후에는 사업의 결과물로 남게 될 하드웨어는 거의 없다.

이상의 몇가지 문제점과 더불어 이 사업을 통하여 우리가 얻고자 하는 연구중심 대학원의 국제적 기술경쟁력이 선진국에서는 어떻게 얻어지는지 살펴보자. 한마디로 요약하면 세계 최고 수준의 선진국 연구중심 대학원의 기술경쟁력은 피나는 자유 경쟁에 의하여 얻어지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대학의 질이 교수의 질을 넘어설 수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정확히 알고 있는 선진 대학들은 대학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최고의 교수 인력을 확보하려고 전세계를 누비고 있다. 이 일은 그 대학을 책임지고 있는 학장이나 총장의 몫이다. 따라서 최고의 학장이나 총장이란 훌륭한

교수를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교수 인력의 확보 시스템은 교수 인력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하고, 이에 따라 많은 교수들이 유연한 노동시장을 통하여 자유롭게 직장을 선택하여 움직이게 된다. 훌륭한 교수는 훌륭한 학생을 부르게 되고, 이는 곧 학교의 경쟁력이 되는 것이다.

유연한 교수 노동시장은 경쟁력 있는 유능한 교수가 좋은 연구조건을 제시하는 곳으로 옮겨다닐 수 있으며, 이런 노동시장의 유연성 또한 자유 시장경제시스템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대표적 연구중심 대학이라 할 수 있는 MIT의 경우 1999-2000학년도 교수들이 수행하고 있는 연구비는 전체 대학 예산의 70%를 차지하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 나라 연구중심 대학의 경우 연구비가 전체 학교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 내지 15% 수준이다. 따라서 경쟁력 있는 교수의 연구비가 대학의 재정 뿐만 아니라 경쟁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교수연봉제나 BK21 같은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유 시장경제 원칙에 따라 교수들이 자기 적성과 연봉에 맞는 학교로 자유롭게 그리고 공정하게 움직일 수 있는 교수 노동시장의 시스템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

앞서 지적한 고등인력 양성사업(BK21)의 문제점과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선진국의 시스템에 근거하여 국가 기술력 제고를 위한 양질의 고등 기술인력 양성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로 학문 정책차원에서 국·공립 대학을 분야별로 통폐합하는 것이다.

이 정책은 국·공립대학을 상향 평준화할 뿐만 아니라 교육 및 연구의 질을 국제적 수준으로 끌어 올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줄 수 있다. 전국의 국립대학에 소규모로 분산되어 있는 우수 교수들을 적정 규모의 집단으로 집중하고, 실험실습장비와 연구비를 지원함으로써 보다 나은 환경의 국제적 수준의 교육기관으로 만들 수 있다. 부수적인 효과로 사립대학의 구조조정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대학교육의 80%를 담당하고 있는 사립대학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 확대이다. 이는 보다 많은 국가 재정 지원을 통하여 사립대학의 기술경쟁력을 확립시킬 수 있다. 재정 지원에 의한 사립대학 간의 경쟁을 유발시킴으로써 훌륭한 교수의 확보가 사립대학의 필수 조건으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선진국 같은 교수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로 보다 많은 학교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줌으로서 경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많은 기관의 참여는 경쟁을 시킬 수 있는 환경이 자연스럽게 조성되어 확실한 경쟁을 통한 목표 달성의 성과를 이룰 것이다. 즉 각 분야별로 10개 이상의 학교를 참여시키고 공정한 경쟁을 시킨 후 2, 3년마다 철저한 평가를 통하여 하위 20 또는 30% 탈락을 전제로 한다면 지금 보다 훨씬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또한 자연스러운 경쟁으로 이어져 이 사업의 탈락과 참여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제

도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넷째로 사업 비용의 많은 부분을 기숙사 건립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현재와 같은 인건비 지원 사업은 단기간 효과는 기대할 수 있을지 모르나, 장기적으로 학생들의 교육부담 비용절감 차원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장기간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기숙사 같은 학교 시설에 투자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교육부담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로 교수들이 자기 능력과 적성에 따라 자유롭게 직장을 옮길 수 있는 환경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 교육부 주장대로 이 사업이 극소수의 학교에 한하여 우수한 학생들에게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고,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원을 육성할 목적이라면 우수 학생들을 가르칠 교수 또한 공정하게 다시 재배치하여야 한다. 이것이 활성화 되면 자연스럽게 교수들 스스로 경쟁력을 키움으로써 국가 경쟁력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부러워 하는 미국의 과학기술 경쟁력은 피나는 자유 경쟁에 의하여 얻어지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자유 경쟁은 모두에게 공정한 룰이 주어질 때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이번 기회에 우리 모두가 얻게 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1. BK21 사업 설명회, 교육부